제22권 제2호(2017. 8): 35~58

JLPF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김은지**·김나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부패가 주민의 조세순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인당 체납액을 조세순응도의 대리변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를 부패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Pooled OLS를 이용하여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등 모든 유형의 청렴도 지수가 일인당 체납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렴도가 낮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부패가 조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부패, 조세순응도, 일인당 체납액, 청렴도지수

Ⅰ. 서 론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체제가 지향하는 규범에 대다수 구성원들의 동의와 더불어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이루는 기준이 필요하다. 조세정의 역시 사회구성원 간의 조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

* 제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헌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제1저자,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전문위원, E-mail: ejkimstyle@gmail.com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E-mail: forever8392@snu.ac.kr
논문투고일: 2017.06.12., 심사일: 2017.07.12., 심사완료일: 2017.07.31.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 나라 살림에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야할 몫을 누군가가 덜 내거나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납세를 주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로 이행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조세당국의 징세비도 훨씬 감소되어 나라살림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최근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체납세액이 많다는 기사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1] 서울 강남 지역 세무서들이 연간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이른바 '부자동네'에 해당하는 서초세무서와 삼성세무서가 체납세액 발생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조세부담에 대한 불공평성을 야기하고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납세자들의 조세불순응으로 인해 세수손실이 발생하면,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중앙정부가 가졌던 여러 권한이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증대되었고 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부패를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중앙정부는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감사나 자체 감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김성호, 2003).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정책이나 행정에 있어 의구심을 야기하여 조세순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도 납세자의 성실납부의향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

1) '부자동네'가 세금 더 안 낸다...서초세무서 체납세액 1위(연합뉴스, 2016.1.6.).

원, 2008). 이러한 납세자의 성실납부의향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청렴하게 주민의 세금으로 정책이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패가 주민의 조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게리 베커 교수(Gary Becker)의 행동경제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납세자들의 납세행위를 설명한 Allingham & Sandmo(1972)부터 사회·심리·제도적 요인 등에 대한 최근의 탐색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조세순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조세순응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지역별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는 드문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데 목적이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본 절을 제외하고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의 조세에 관한 이론과 문헌을 고찰하고 조세순응도에 관한 기존연구를 조망한다. Ⅲ절 실증분석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설정 및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부패가 조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Ⅳ절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로 끝을 맺는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부패와 조세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이나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앞 항목들의

행위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한다(조정래 외, 2013). 부패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규모 파악이 힘들다(조수연, 2017).

이러한 부패는 정부의 재정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패한 정치가가 전시행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대형 재정투자사업을 벌인다던가, 부패한 관료가 더 많은 지대추구를 위해 비생산적 재정지출을 일삼는 것 등은 부패와 재정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부패는 조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그 대가로 해당 납세자의 세금을 면제하여 줄 경우 납세자가 낸 세금은 조세수입이 아닌 세무공무원 개인의 수입으로 이전된다. 이렇듯 세무공무원이 징수하는 조세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 전체의 조세수입 규모는 감소한다(김의섭, 2015).

부패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의 연구가 부패와 경제성장 또는 재정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연구는 부패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의 대표 격으로 Huntington(196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부패가 관료제 내부의 경직성을 제거하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Murphy et al.(1991)은 부패가 만연하면 유능한 개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추구하는 것 보다 비생산적 지대 추구의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된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반박하였다. 이후 다양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통해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 Tanzi & Davoodi(1997)는 부패한 관료들은 뇌물을 획득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이나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에 주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지출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부패가 심할수록 공공부문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러한 투자는 생산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Meon & Sekkat(2005)는 정부의 질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패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악화된다고 주장하

였다. 저자들은 정부의 낮은 질적 수준의 대리지표로서 '법질서 약화'와 '비효율적 정부', '정치적 혼란'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질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투자를 통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각도에서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Mo(2001)는 정치적 불안정,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의 감소 등을 강조하였고, Lambsdorff(2003)는 정부의 불안정성, 낮은 민주주의 발달 수준, 관료제의 비효성이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김의섭, 2005).

한편, 부패의 부(-)의 전달경로로서 조세에 주목하는 Tanzi(1998)는 부패는 조세수입(tax revenue)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납세자와 납세공무원간의 불필요한 접촉은 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제도는 납세자가 도움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무행정을 둘러싸고 세무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임금이 낮지 않아야 하며, 세무행정상 재량권이 가급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후속연구(Tanzi & Davoodi, 2000)에서 부패는 정경유착, 세수입과 연관된 공직자들의 부패 등과 관련이 있어 법인세율 및 법인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수입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치권과 세금부담의 주체 간 협상이 가능하므로 세목에 따라서 세금부담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조세회피로 인한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를 보고되지 않거나 과소보고 등 불성실한 보고로 인하여 공식적인 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국민총생산(GNP)이라고 정의하면서, 지하경제가 확대될수록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세는 세법이 폭넓게 이용 가능해야 하고 명확히 기술되어야 하며, 세정당국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점검을 받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으로서 조세에 관한 여러 문헌을

2) 한국행정연구원의 부패인식조사(2015)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종합하면, 부패가 조세회피 행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일부 견해(Goerke, 2008)도 있지만, 대체로 부패는 조세에 부(-)의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조세순응은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인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조세순응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데, 조세부담이 불공평하다거나 공공지출이 낭비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면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지하경제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조세행정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세순응에 관한 기존연구

조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자원동원 수단이다(Hettich & Winer, 2002). 물론 조세 이외에도 여타 세입수단들이 존재하지만 조세에 비해 비중도 작고 조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조세는 주민들에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기본 재원이지만 납세자들이 공공서비스라는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꺼려하는 모순적, 비합리적 태도 역시 가지고 있어 민주적인 국가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Hug & Sporri, 2011).

조세순응(tax compliance)이란 납세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조세와 관련된 행동뿐만 아니라 납세와 관련된 다양한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조세와 관련한 감정, 의식, 태도, 행동뿐만 아니라 충성, 불평, 불만, 침묵 등의 다양한 반응을 포괄한다(김영락, 2012).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Jackson & Milliron(1986)은 세율(Tax Rates), 세무당국의 간섭(IRS Contact), 정부신뢰도(Trust in the Government), 복잡성(Complexity), 조세윤리(Tax Ethics),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Sanctions), 과세의 공평성(Fairness), 세무조사에 의한 적발확률(Probability of Detect), 교육수준(Education Level), 소득수준(Income Level) 등을 들고 있다.

조세순응 행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Allingham & Sandmo(1972)가 처음으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납세

게임을 통한 납세자들의 납세행위를 설명한 이래 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가 이 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현진권, 2001).[3] 경제학 분야에서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비용, 벌금(penalty rate), 적발확률(probability of detection) 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규제와 처벌위주의 세무정책의 이론적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Allingham & Sandmo(1972)의 모형에서 시작된 경제적 억지모형(Economic Deterrence Model)이 세무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오히려 세법에 대한 순응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김재진, 2013), 납세자가 탈세를 경험한 이후의 죄책감, 사회적 책임감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Grasmick & Bursik(1990)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가 느끼는 죄책감이 조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탈세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세법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김재진, 2017 재인용). Torgler & Murphy(2004)는 조세윤리가 국가와 의회에 대한 신뢰도와 종교적 믿음이 높은 시민은 도덕적 의무감도 높게 형성되어 조세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도덕성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이외에 납세자의 조세순응 행동 양식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김준홍(2012)은 대체로 시민의 납세행동은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세순응은 민주주의 운용에 대한 합리적 보상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맥락에서의 민주주의 변수가 납세자의 조세순응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투표로 대변되는 민주주의를 선호할수록 조세순응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민주주의 지향적인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납세자로서의 시민정체성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김준홍, 2012). Daude et al.(2012)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제도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탈세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3) 이 연구는 탈세행위를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으로, 납세순응행위를 수익률이 낮지만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가정하고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게임하는 환경 하에, 납세자들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상정한다. 이러한 모형 하에서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과 탈세가 발각되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납세자 측면에서는 비용이 되므로, 이러한 구조 하에서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최적의 소득규모를 신고하게 된다(김유찬, 2004).

국가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고 민주주의의 주요 특성을 재원배분이라고 생각할수록 납세의식(Tax Morale)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변수 외의 세무행정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도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정교한 세무정책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도입은 조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진권(2005)은 세무조사와 가산제, 조세에 대한 교육이 납세순응도를 높이는데 있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 조세순응에 관한 주요 연구

구분		저자	주요 내용
연역적 미시방법론 접근		Allingham & Sandmo(1972)	기대효용이론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의 게임구조 하에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 설명
		Yitzhaki(1974)	벌금이 탈루세액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때, 세율의 증가는 탈세의 감소를 가져옴
		Boyd(1986)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처벌 위주의 정책이 효과적임
		김일중·현진권 (2007)	탈세정보 공개수준의 법·경제학적 분석
요인론	세무 정책적 요인	김일중·현진권 (2013)	코즈 이론을 응용하여 조세정보를 정부와 국민들 간 재산권 할당문제로 간주하고 최적의 재산권 문제를 살펴봄
		Dunbin & Wilde(1988)	세무조사가 조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
		Slemrod(2005)	조세가 복잡할수록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부정적 영향
	제도적 요인	김기성 외(2014)	온라인 납부시스템의 편의성과 지방세제 공평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김준홍(2012)	국민투표에 대한 선호도 등을 민주주의 변수로 삼아 민주주의 관련 변수들과 조세순응도에 관한 관계 분석
		Beck et al.(2000)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조세순응도가 높음
	심리·문화적 요인	임영규(2015)	납세윤리와 공평성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적 냉소주의 성향이 낮은 반면,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 모두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적 냉소주의 성향도 낮게 나타남
		변용환(1998)	조세구조의 불공평성이 강력한 조세저항 인식을 유발하는 요인
		박영석·이지훈 (2013)	공정사회 인식과 납세 행동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Braitwaite (2003)	납세자가 자신과 조세처 사이의 사회적 거리에 대한 인지 정도에 따라 세금 납부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짐
	기타 요인	McGee et al.(2010), Geide-Stevenson& Ferro(2001) 박명호·심태섭(2008)	나이, 성별, 교육, 혼인상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조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침

납세자의 교육수준이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 박명호·심태섭(2008)은 우리나라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Torgler(2004)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의 납세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도 납세자의 조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orgler(2004)는 여성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조세순응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Daude et al.(2012)도 그와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조세순응도를 연결 짓는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에서는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부패가 조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Picur & Riahi-Belkaoui(2006)는 선진국 및 30개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부패(corruption) 및 관료체제(Bureaucracy)와 납세순응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부패에 대한 통제력이 좋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세순응에 도움이 되는 조세 윤리(Tax Morale)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료체제를 개선하고 부패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이루어져왔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부패 지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지수를 활용하여 관료체제의 부패 정도가 조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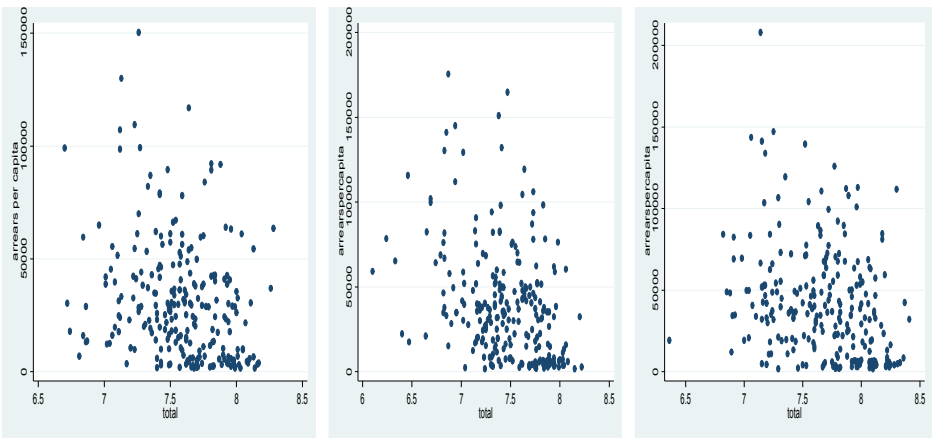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청렴지수와 일인당 체납액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순응도이므로 이를 나타내는

변수인 일인당 체납액을 종속변수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가장 핵심이 되는 독립변수는 부패이다. 이와 함께 조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켜 부패가 조세순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종합청렴도와 일인당 체납액의 산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x축은 종합청렴도이며 y축은 일인당 체납액이다. 지역별로 일인당 체납액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청렴도 지수는 대략 7점대에서 8.5점대(10점 만점)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일인당 체납액과 종합청렴도(2013~2015)



선형회귀 분석에 앞서 변수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검정을 하였다. 0.70을 절삭치로 사용한 결과 분석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들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검정을 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VIF 10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Mean VIF 역사 1.56으로 1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형회귀모형 분석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 한편,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역시 검정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설정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acrc/

index.do)의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정한 지수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별 체납액 및 지방세수입이다. 또한 노인인구, 대졸이상 인구, 실업률, 남녀 성비 등의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투표율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portal/main.do)에서 가져왔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이며, 각 연도당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조세순응을 대리하는 변수로 현년도 '일인당 체납액'을 설정하였다. 만약 주민이 높은 조세순응을 보인다면 성실납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체납액이 많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 시 '일인당 체납액'을 로그변수화하여 사용한다.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국내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를 들 수 있다. 청렴성은 구체적인 부패 범죄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공무원의 책임성, 정부 투명성과 대응성과 같은 거버넌스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높으며(장석준, 2010),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부패의 대응개념인 반부패 지수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뇌물, 연고주의, 선물을 통한 이해충돌 등과 같은 부패행위들은 거의 대부분 청렴성 위반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 청렴성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김상미,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부패의 대리지표로서 부패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청렴도 개념을 활용하고자(장석준, 2010),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권익위원회는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4)

Variable	VIF	1/VIF
unemployment	2.16	0.464008
college_pe~a	1.89	0.528189
turnout	1.53	0.652309
gender	1.20	0.832492
total	1.02	0.980733
Mean VIF	1.56	0.641025

를 통해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수준을 측정해왔다. 2002년, 2003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외부청렴도[5]만 측정하다가 2004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부청렴도[6]를 시범적으로 측정했고, 2007년 시, 2008년 군, 2009년 구를 대상으로 각각 측정한 후 2010년부터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부터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산한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객관적 계량지표[7] 도입 및 정책고객평가[8]를 시범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객관적 계량지표 및 정책고객평가까지 합한 종합청렴도를 산출하였다(조정래 외, 2014). 이처럼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지수는 다각도에서 지자체의 청렴도를 측정함에 따라 부패 유형별로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인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제변수로서 납세자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다. 납세자의 교육수준이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Torgler(2004)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세에 대한 지식은 자발적인 조세순응의 핵심 변수로 기존 연구들이 밝히고 있음에 따라(Kasippilai, 2000)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지식을 대리하는 지표로 대졸이상 인구비율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도 요인도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지향적인 시민은 탈세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 제

---

5)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의 입장에서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등을 측정한 잠재청렴도와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를 측정한 체감청렴도로 구분되며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 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적용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0).

6) 내부청렴도는 1년 이상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측정한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와 관련한 금품, 부당한 집행 등의 경험이나 부패 인식 등을 측정한 업무청렴지수를 통해 산출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0).

7) 객관적 계량제표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 부패사건 언론보도 현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10).

8) 정책고객평가는 업무관계자, 해당 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정책업무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측정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2010).

도에 대한 신뢰가 있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준홍, 2012; Daude et al., 2012)를 반영하여 민주주의 제도의 대리변수로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활용하였다. 그밖에 납세자의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도 납세자의 조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asippilai, 2000). Torgler(2004)는 여성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조세순응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Daude et al.(2012)도 그와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남녀 간 공익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한 Dollar et al.(2001)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공익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남녀성비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납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경제상황을 대리하는 변수로 실업률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9]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총수입 중 지방세수입 비중을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수입 비중은 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세수입 비중을 모형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향변수(time trend)를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들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변수의 정리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조세순응 정도	log(1인당 체납액)
독립변수	부패	청렴도 지수(종합, 외부, 내부)
통제변수	교육수준	대졸이상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
	투표율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
	성별	지역별 남녀성비
	경제상황	실업률
	조세수입 규모	자치단체의 총수입 중 지방세수입 비중
	경향 변수	2013~2015: 1~3

9) 실업률의 경우, 자치구의 실업률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은 관계로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실업률만을 활용하였다. 또한 특,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경우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특정 시, 군을 제외하고는 시보다 군의 실업률이 월등히 낮음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변수를 바탕으로 한 회귀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Tax\,Compliance_i = \beta_0 + \beta_1 Corruption_i + X_{ip} + \epsilon_i \qquad (1)$$

위 식에서 i는 분석단위를 의미하며, X_i는 통제변수들의 벡터를, ϵ_i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종속변수인 일인당 체납액을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 3〉과 같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년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관측치는 726개이며, 종속변수인 일인당 체납액을 표준변수화 한 값의 평균은 10.0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청렴도 변수의 경우 평균은 약 7.6 정도로 나타났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는 6점 초반에서 9점 초반대로 청렴도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3〉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합청렴도	726	7.57	0.37	6.1	8.41
외부청렴도	726	7.67	0.40	6.30	8.44
내부청렴도	726	7.82	0.44	6.23	9.13
log(일인당 체납액)	726	10.07	1.10	7.32	12.25
노인인구비율	726	17.49	7.57	5.86	36.59
교육수준	726	18.91	9.76	4.61	64.26
투표율	726	55.93	4.92	44.1	71.4
실업률	504	1.94	1.28	0	5.5
남녀성비	726	100.58	5.05	90.26	130.76
지방세비중	726	12.74	8.92	1.22	54.41

2. 실증모형 추정 결과

이하에서는 선형회귀모형에 기초하여 부패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한 〈표 4〉에 따르면,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계수의 크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종합청렴도는 종속변수인 일인당 체납액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종합청렴도가 높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 간 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경우 투표율의 회귀계수 값이 눈에 띄는데,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변수를 대리하는 투표율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은 지역일수록 조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대졸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낮다는 박명호·심태섭(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조세사용 적격성 판단에 까다로워지고, 탈세와 조세회피의 기회가 많아져 조세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Torgler(2004)의 주장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성비 역시 남성비율이 높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조세순응도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남녀성비의 경우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상회하는 경우 1인당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조세순응도가 여성의 조세순응도보다 낮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상황을 대리하는 실업률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진다. 이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낮아져 일인당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모형의 견고함(robustness)을 위하여 분석한 Model 2, Model 3, Model 4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 종속변수: 종합청렴도

	종속변수: 1인당 체납액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상수	8.57*** (0.92)	8.04*** (0.91)	12.9*** (0.62)	8.79*** (0.84)
종합청렴도	-0.09* (0.06)	-0.09* (0.07)	-0.06 (0.07)	-0.07 (0.07)
노인인구비율	0.01 (0.01)	0.02** (0.01)	-0.001 (0.01)	
교육수준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1)
투표율	-0.03*** (0.01)	-0.03*** (0.01)	-0.04*** (0.01)	-0.02*** (0.01)
실업률	0.09** (0.03)	0.11*** (0.03)	0.07** (0.03)	0.07* (0.03)
남녀성비	0.04*** (0.01)	0.04*** (0.01)		0.03*** (0.01)
지방세수입 비중	-0.002 (0.005)	-0.01 (0.01)	-0.01 (0.01	
경향 변수	0.11*** (0.03)			
Observations R-Squared Adjusted R-Squared	726 0.3280 0.3452	726 0.3416 0.3361	726 0.2432 0.2341	726 0.2946 0.2875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p〈.1, **p〈.05, ***p〈.01

아래의 〈표 5〉는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당한 사익추구, 특혜제공 등에 대해서 민원인 등이 경험한 직·간접적 부패사건 및 인식 정도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표 5〉 종속변수: 외부청렴도

	종속변수: 1인당 체납액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상수	8.76*** (0.90)	8.52*** (0.90)	13.46*** (0.59)	9.33*** (0.83)
외부청렴도	−0.12** (0.06)	−0.15** (0.06)	−0.13** (0.06)	−0.15* (0.06)
노인인구비율	0.01 (0.01)	0.02*** (0.01)	−0.002 (0.01)	
교육수준	0.02*** (0.01)	0.03*** (0.01)	0.02** (0.01)	0.02*** (0.01)
투표율	−0.03*** (0.01)	−0.03*** (0.01)	−0.04*** (0.01)	−0.02*** (0.01)
실업률	0.09** (0.03)	0.11*** (0.03)	0.07** (0.03)	0.07* (0.03)
남녀성비	0.04*** (0.01)	0.04*** (0.01)		0.03*** (0.01)
지방세수입 비중	−0.01 (0.01)	−0.01 (0.01)	−0.01 (0.01)	
경향 변수	0.10** (0.03)			
Observations R-Squared Adjusted R-Squared	726 0.3268 0.3160	726 0.3147 0.3050	726 0.2468 0.2377	726 0.2992 0.2922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p〈.1, **p〈.05, ***p〈.01

외부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한 경우에도,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종속변수인 일인당 체납액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외부청렴도가 낮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 간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표 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은 지역일수록 조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대졸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합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한 앞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상황을 대리하는 실업률 역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진다. 외부청렴

도를 독립변수로 한 경우에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낮아져 일인당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녀성비의 경우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상회하는 경우 1인당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조세순응도가 여성의 조세순응도보다 낮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하의 〈표 6〉은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문화와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한 경우 실증분석 결과이다. 내부청렴도는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를 비롯하여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예산집행 등 업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종속변수: 내부청렴도

	종속변수: 1인당 체납액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상수	9.48*** (0.92)	8.76*** (0.91)	13.8*** (0.55)	9.72*** (0.86)
내부청렴도	-0.19*** (0.06)	-0.16** (0.06)	-0.18** (0.06)	-0.16** (0.06)
노인인구비율	0.01 (0.01)	0.02** (0.01)	0.001 (0.007)	
교육수준	0.02** (0.01)	0.03*** (0.01)	0.02** (0.01)	0.02*** (0.01)
투표율	-0.03*** (0.01)	-0.03*** (0.01)	-0.04*** (0.01)	-0.02*** (0.01)
실업률	0.08** (0.03)	0.11*** (0.03)	0.07** (0.03)	0.07** (0.03)
남녀성비	0.03*** (0.01)	0.041*** (0.01)		0.03*** (0.01)
지방세수입 비중	0.001 (0.004)	-0.001 (0.004)	-0.004 (0.005)	
연도더미	0.12*** (0.03)			
Observations R-Squared Adjusted R-Squared	726 0.3366 0.3259	726 0.3182 0.3086	726 0.2545 0.2455	726 0.3025 0.2955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p〈.1, **p〈.05, ***p〈.01

내부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한 경우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내부청렴도가 낮을수록 종속변수인 일인당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두 변수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내부청렴도가 낮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의 외부적 측면과 내부적 측면, 그리고 이를 종합한 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부패는 조세순응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본 분석에서도 투표율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한 분석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은 지역일수록 조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odel 2, Model 3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대졸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선 두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경제상황을 대리하는 실업률 역시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진다. 즉, 내부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한 경우에도 실업률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낮아져 일인당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녀성비의 경우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상회하는 경우 1인당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조세순응도가 여성의 조세순응도보다 낮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부패가 조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어려운 재정여건과 증세정책의 제한 속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 세법 규정 하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이고 스스로 조세회피 행위를 자제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

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의 조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부패가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패가 조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원인이 인식하는 부패(외부청렴도 지수)는 조세순응도를 대리하는 변수인 일인당 체납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료체제 내에서 인식하는 부패(내부청렴도 지수)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지표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부패는 조세순응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유형의 청렴도지수와 일인당 체납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청렴도가 낮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이 높아 부패가 조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인구·사회 및 제도적 요인 역시 조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인구가 많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순응도는 낮아진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나타내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일인당 체납액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주의 의식이 높을수록 조세순응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은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조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적인 시도를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존재한다. 먼저 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한으로 분석모형에서 조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납세자의 조세순응에는 납세자의 소득과 세율, 그리고 문화, 규범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3개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보다 정밀한 분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기성·김종순·홍근석. (2014).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4), pp. 391-416.

김상미. (2006). “지방정부의 청렴성 제고 방안: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1(2), pp.19-59.

김성호. (2003).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 부패방지와 신뢰정부 구축”.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03. 01, pp. 27-52.

김영락. (201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회계학회지」, 31, pp. 73-94.

김유찬. (2004).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4-18.

김의섭. (2015). “부패의 재정·경제적 분석”. 「한국재정정책논집」, 7(2), pp.31-63.

김일중·현진권. (2007). “탈세정보 공개수준의 법경제학적 분석”. 「공공경제」, 12(2), pp. 1-28.

_____. (2013). “납세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하나?: 법경제학적 접근”. 한국경제연구원 working paper, 13-10.

김재진. (2017). “탈세, 세무조사가 유일한 해법인가: Beyond the Allingham and Sandmo Model”. 「재정포럼」, 240, pp. 6-31.

김준홍. (2012). “민주주의의 조세순응 효과”. 「한국행정학보」, 46(2), pp. 115-136.

박명호·심태섭. (2008).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와회계저널」, 9(4), pp. 55-84.

박명호·김봉근·김정권. (2008).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박영석·이지홍. (2013). “납세태도, 공정 사회 인식 및 납세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pp. 109-133.

변용환. (1998). “납세자의 조세관”. 「세무학연구」, 11, pp. 221-264.

이근주. (2013).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자성. (2014).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1(5), pp. 203-225.

임영규. (2015). “납세의식이 납세 냉소주의적 태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46, pp. 153-175.
장석준. (2010).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2), pp. 165-192.
조수연. (2017). “정부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조정래·이현정·김장희. (2014). “부패와 젠더: 기초자치단체 부패 영향요인의 탐색”. 「정부학연구」, 20(2), pp. 89-121.
최헌섭. (2009). “국가간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연구」, 28(2), pp. 21-39.
현진권. (2000). “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가?-납세순응행위의 분석과 정책제언”. 「공공경제」, 6(1), pp. 95-113.
_____. (2005). “한국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분석」, 11(3), pp.135-175.
국민권익위원회. (2010. 7).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
Allingham, M.G. and Sandmo, A. (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4), pp. 323-338.
Braitwaite, V. (2003). “Taxing Democracy”. Ashgate Publishing Ltd.
Beck, T., Levine, R. and Loayza, N. (2000). “Finance and the source of growth”. Journal of Finance economics, 58, pp. 261-300.
Boyd, C. (1986). “The enforcement of tax compliance: some theoretical issues”. Canadian Tax Journal, 34(3), pp.588-599.
Dubin, J. and Wilde, L. (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federal income tax auditing and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41(1), pp. 61-74.
Dollar, D., Fisman, R., & Gatti, R. (2001). “Are women really the “fairer” sex? Corruption and women in government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6(4), pp. 423-429.
Eisenhauer, J., Geide-Stevenson, D. and Ferro, D. (2011). “Experimental Estimates of Taxpayer Ethics”. Review of Social Economy, 69, pp. 29-53.
Friedman, E., Johnson, S., Kaufmann, D., Lobaton, P. (2000). “Dodging the grabbing hand: the determinants of Unofficial activity in 69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 pp. 459-493.
Goerke, L. (2008). “Bureaucratic corruption and profit tax evasion”. Economics of Governance, 9, pp.177-196.
Grasmick and Bursik.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rnal the detere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24(3), pp. 837-862.

Huntington, S. (1969).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Kasipillai, J.(2000). "Taxpayer knowledge index as a clue for non-compliance". Journal of Pakistan's Taxation Laws, 81(3), pp.1 069-1075.

Meon, P. and Sekkat, K. (2005). "Does corruption grease or sand the wheels of growth?". Public Choice, 122(1), pp. 69-97.

Mo. P.H. (2001).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9(1), pp. 66-79.

Murphy, K.M., Shleifer, A. and Vishny, R.W.. (1991). "The Allocation of Talent: Implication for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pp. 503-530.

Slemrod, J. (2005). "The etiology of tax complexity: Evidence from U.S. State Income Tax Systems". Public Finance Review, 33(3), pp. 279-299.

Torgler. (2004). "Tax morale in Asian countri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15, pp. 237-266.

Tanzi, V. and Davoodi, H. (1997).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Tanzi, V.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IMF Working Paper.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Corruption on Tax Compliance: For Local Governments

Kim, Eunji & Kim, Na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orruption on the tax complianc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tax compliance using Pooled OLS. From 2013 to 2015, 242 local governments have analyzed the amount of per capita arrears as a proxy variable for tax compliance and the Integrity Index as a proxy for corru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ll types of Integrity Indices such as 'Total Integrity', 'External Integrity' and 'Internal Integrit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gression coefficients for per capita arrears.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degree of integrity in local governments, the greater the amount of per capita arrears, indicating that corrup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tax compli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tax compliance of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grity and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Keywords: corruption, tax compliance, Per capita arrears, integrity index, Pooled OLS